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윤종술, 최용기, 변경택, 박경석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9년 7월 1일(월)

담당

조현수 (

페이지

총 8매(붙임자료 포함)

제목

(법정·비법정)장애인단체 차별책동 박능후 장관 공개사과 촉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단체입니다.

3. 지난 6월 25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기자의 질문에 법정 5개 단체장의 공통된 요청이라며 “소위 말하는 비법정 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거나 과도한 의견표출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의견표출에 너무 정부가 경도되지 말고 균형 있게 기존의 법정 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 말했다.

4. 우리는 박능후 장관이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31년 만의 변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정부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장애인 5개 법정단체에서의 간담회 내용을 발언 한 것은 장관으로서 장애인 단체끼리 분열을 책동하고 차별하는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 그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그리고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하기 위해 10년을 투쟁해 온 ‘비법정’ 장애인단체로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를 발표하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박능후 장관에게서 장애인단체 차별책동 발언을 듣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실망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6. 이에 우리는 박능후 장관의 장애인단체 차별책동 발언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으며 공개사과를 촉구합니다.

7.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7월1일 오후8시까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시에는 「(법정/비법정)장애인단체 차별책동 박능후 장관 공개사과 촉구 투쟁」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정·비법정장애인단체 차별책동 박능후 장관 공개사과 촉구 행진 및 1박2일 농성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일시 : 2019년 7월 1일(월) 오후8시~ 오후10시
- 행진 : 서울역 → 사회보장위원회(충정로)

(법정·비법정장애인단체 차별책동 박능후 장관 공개사과 촉구 출근행진 및 무기한 농성 선포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일시 : (행진) 2019년 7월 2일(화) 오전7시30분~오전9시 행진
(기자회견) 2019년 7월 2일(화) 오전 10시
- 행진 : 사회보장위원회(충정로)→서대문사거리→사회보장위원회
- 장소 : (기자회견) 사회보장위원회

첨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성명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끝.

<첨부>

Leave No One Behind!!

박능후 장관님, 비법정 단체와 약속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십시오!!

어제(2019. 6. 25)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브리핑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에게 약속한 국민명령 1호이다.

우리는 31년 만에 장애등급제 폐지로 다양한 유형별 개인별 맞춤형 지원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형별 특성에 맞게 서비스 시간이 늘어서 중증장애인들도 집구석이나 시설에서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것을 믿었다.

2012년 8월 21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수용시설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역 지하 2층에서 1842일간 농성을 하였다. 지난 2017년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조문하며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하였고 우리는 광화문 농성장을 철수하였다.

그러나 어제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은 무늬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뿐,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철학과 실행계획에 대한 밑그림도 없이 허울 좋게 포장된 계획만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이 31년 만에 변화에 대한 희망의 약속은 사라지고 종합조사표의 점수조작으로 불안과 공포에 날을 맞이하며 5백만 장애인의 마음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보건복지부의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이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조사표를 도입하며 '점수 조작표'를 만들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그리고 필요도를 고려하여 만들겠다는 종합조사표는 기획재정부의 '실링 예산'에 갇혀 조작되어버린 것이다. 최종중장애인이 현재 받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마저도 집단으로 깎여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

합조사표(이하 종합조사표)' 내용을 파악하고 2019년 6월 14일 오전 8시부터 시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사회보장위원회를 접거하였다. 이날 만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어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5개 장애인단체만 불러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기자간담회 이전 장애인단체 의견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자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였다.

“오늘은 장애인단체들 중에서 전국적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5개 단체가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하고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 장애단체가 많이 있지만 좀 더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셨던 분들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만났지만, 소위 말하는 비법정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거나 과도한 의견표출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의견표출에 너무 정부가 경도되지 말고 균형 있게 기존의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있었고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지분이 많은 5개 단체들의 민원성 발언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중요한 브리핑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비법정 단체들의 과도한 의견표출로 언급한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발언에 대하여 실망감과 더불어 매우 유감을 표한다.

이에 대해 비법정단체인 한자협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 장애인의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법정단체가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비법정단체라고 해서 잘못된 정책에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인가?
- 5개 법정단체와 간담회는 가능하고 6월말 비법정단체인 우리와 면담 약속은 시간이 없어 지키지 못한 것인가?
- 문재인 정부는 비법정 단체가 1842일 동안 광화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그토록 요구했던 장애등급제 폐지를 대통령 국민명령 1호로 명령하였다. 대체 법정단체와 비법정 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비법정단체인 한자협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단체간의 분리와 갈등을 조장하면서 그것을

장애인 정책 실천의 미흡함을 합리화 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 이것이 야 말로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 민주사회에서만큼은 사라져야 하는 적폐의 모습 이자 관료주의적 태도이다.

또한 법정·비법정단체라고 이분법으로 가르면서 보건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법정단체의 대표성만 인정하는 태도는 마땅히 규탄 받아야한다. 더욱이 장애인정책을 발표하는 중요한 기자간담회에서 ‘법정단체 대표성’을 운운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망언이자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비법정단체인 한자협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 해 나갈 것이다. 법정·비법정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이 존엄한 국민임을 인정받는 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끝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밝히 며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하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언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하나. 6월 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약속 이행을 요구한다.

하나. 종합조사표가 점수조작표가 아님을 복지부는 증명 하라.

2019. 6. 26.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법정장애인 5개 단체

6월25일은 ‘동족상잔(同族相殘)이 일어난 민족의 비극적인 날이다. 그날 박능후 장관은 장애인계의 ‘동족상잔’의 방아쇠를 당겼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9년 6월25일, 박능후 장관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대한 기자브리핑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들 간 분열의 방아쇠를 당겼다. 박능후 장관이 언급한 비법정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에게 법정 5개 단체의 말을 빌어서 당긴 방아쇠이다.

2010년 9월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등급제 때문에 국민연금 장애인지원센터를 접거하며 단식농성을 벌였고, 박근혜 정권 치하 1,842일 동안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쳤다.

2019년 7월 1일, 드디어 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의미 있는 발표하는 정부 브리핑 자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박능후 장관의 세치 혀로 맞은 총알이라 더욱 깊은 상처를 입었다.

박능후 장관은 기자의 질문에 법정 5개 단체장의 공통된 요청이라며 “소위 말하는 비법정 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거나 과도한 의견표출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의견표출에 너무 정부가 경도되지 말고 균형 있게 기존의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 말했다.

우리는 기왕에 책임 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이니 박능후 장관은 책임 있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 말을 소개한 의도와 법정 5개 단체장의 발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법정5개 단체가 시위하고 과도한 의견표출 했다고 주장하는 비법정 단체의 의견에 경도되어왔는가.

- 정부는 지금까지 전문가와 법정장애인단체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등 모든 정보를 소통하고 공식화 시켜왔다. 박능후 장관은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와 두루 만났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만남과 소통에 대해 매우 귀중하게 생각한다. 특히 박능후 장관은 박근혜 정권

에서 우리를 ‘쌍무시’하고 보건복지부가 법정5개 단체 등 법인 단체 중심으로 소통하고 갈라 찼던 과거 적폐정권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소통을 시작하였다. 박능후 장관의 소통은 광화문 지하철도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친 1,842일의 농성장에 찾아와 만나고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다.

이에 우리는 박능후 장관이 법정 5개 단체의 말을 빌어서 그들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주장 하는 비법정단체’를 운운한 것은 무슨 의도로 발언했는가와 지금까지 만나면서 그들의 주장에 경도되었는지 답변을 촉구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비법정 단체들의 시위와 과도한 의견표출에 의해 경도된 내용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냐 생각하는가?

- 지금까지 법정 5개 단체가 명시하지 않았지만 ‘비법정 단체들의 시위와 과도한 의견 표출’을 언급한 곳은 단체들이 주장한 내용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의 가장 크게 차지하게 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연금 등의 개인별 지원서비스 예산의 확대이다. 그것을 위해 한강철로를 6시간을 기었고, 수많은 정부기관들의 점거와 거리 시위를 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비법정 단체들이 주장한 경도된 내용은 ‘무엇이 라고 생각 하는가’. 도 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 그리 시급하고 중요하기에 법정 5개 단체의 발언을 소상하게 기자회견 자리에서 소개했는가. 그 내용을 말해주면 감사하겠다.

셋째. 복지부가 법정·비법정을 나누는 기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복지부 입맛 기준이 아닌가?

-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에 따라 26개 단체에 62억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단체 특화사업으로 8억9천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단체의 지원예산은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척박한 대한민국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책임 중에 하나이다. 오히려 정부가 해야할 업무를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수행함으로써 매우 긍정적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데 법정·비법정단체로 구분하여 지원근거를 만들고 법정단체로 등록하는 단체마저 제한하는 복지부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밝혀야 한다. 항상 말하는 ‘같은 목적

단체의 중복 문제'라 했다. 그렇다면 지금 26개 법정단체는 같은 목적의 단체가 중복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인가.

박능후 장관의 동족상잔 방아쇠를 당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법정·비법정을 구분한 것이다. 그 동안 법정·비법정을 운운하며 장애인계의 유형별·단체별 갈등을 돈 몇 푼으로 조장하는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복지부 관료들은 지금까지 장애인단체들을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악질적 방식으로 다루면서 정당한 권리의 주장을 장애인계의 동의를 운운하는 것은 거부했던 것에 강한 유감을 밝힌다.

넷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문제와 다른 타 서비스 예산 문제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다는 투의 발언은 매우 유감이다.

- 기획재정부의 '실링예산'에 갇혀서 '종합조사표' 총점을 그대로 두고 유형별·개인별 조정을 한 '점수조작표' 만든 복지부가 법정5개 단체의 주장을 빌미로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보기를 촉구한다.

박능후 장관은 먼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종합조사표'에 의해 유일하게 적용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평가하며 장애유형, 장애인 개인들끼리 서비스 증감, 삭감, 탈락을 조장하고 동족상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2020년에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어야 하는지 밝혀라.

그리고 수없이 묻는 질문이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권리로 보장받기 위한 65세 이상 제한 폐지, 24시간 필요도 인정 및 예산 반영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다시한번 공개적으로 물어본다.

2019. 6. 2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